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Vo의 재정분권지수를 중심으로

Impa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Economic Growth : Focused on Vo's Fiscal Decentralization Index

홍근석*

Hong, Geun-Seok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 III. 방법론
- IV. 분석결과
- V. 결론

이 연구는 Vo의 재정분권지수(FDI)를 적용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에 따라 재정분권의 효과성이 달라지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정분권과 지역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 전통적 재정분권 지표를 사용한 모형의 경우 재정분권은 경제성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부(-)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Vo의 재정분권지수(FDI)를 사용한 모형의 분석결과 재정분권은 지역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의 여부는 재정분권을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의 적절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즉, 재정분권이 지방정부에게 세입·세출에 대한 실질적인 자율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재정분권은 지방정부 간 경쟁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궁

* 대구경북연구원 지방자치팀 책임연구원

논문 접수일: 2013. 4. 22, 심사기간(1차): 2013. 4. 22 ~ 2013. 6. 4, 게재확정일: 2013. 6. 4

극적으로는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주제어: 재정분권, 지역경제성장, 재정적 자율성, 재정분권지수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effec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are changed by local governments' fiscal autonomy through applying Vo's fiscal decentralization index(FDI). It also provide more apparent conclusion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affects economic growth negatively by the model in which uses traditional indicator, although this negative effec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the contrary, the result that uses the Vo's FDI index reveals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has positive effect to economic growth.

As the result from this study explains, the effe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to economic growth depends on the appropriateness of institution that is designed to perform fiscal decentralization. In other words, when the fiscal decentralization provides practical autonomy of tax revenue and expenditure to local government, it will increase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through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that will eventually contributes economic growth of local government.

□ Keywords: fiscal decentralization, economic growth, fiscal autonomy, fiscal decentralization index

I. 서론

1970년대 이후 나타난 정부실패는 독점적 권한을 지닌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세입·세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재정분권(fiscal decentralization)은 분권 개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즉, 재정분권은 지방정부 간 경쟁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며, 더 나아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재정분권의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들 역시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재정분권에 관한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재정분권과 자원배

분의 효율성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 연구로는 Tiebout(1956)의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Feet)’, Olson(1969)의 ‘재정균형(fiscal equivalence)’, Oates(1972)의 ‘분권화의 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 Brennan & Buchanan(1980)의 ‘Leviathan 가설(Leviathan Hypothesis)’ 등이 있다. 다음으로 1990년대 이후의 연구들은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시도를 통해 재정분권의 연구 영역을 보다 확장하였다. 대표적으로 Oates(1993), Martinez-Vazquez & McNab(2003), Brueckner(2006) 등은 재정분권이 자원배분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즉, 지방정부에 의해 결정된 정책이 교육이나 기반시설과 같은 공공재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지역의 선호와 특성을 보다 잘 고려할 수 있으며, 재정분권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공급을 혁신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지방정부에게 제공하고, 지방정부 간 경쟁이 보다 낮은 세율과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설명한다(Thornton, 2007: 64-65).

그러나 재정분권의 효과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은 일관된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분권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학자들은 재정분권을 공공지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한다(Yilmaz, 1999; Behnisch, Buttner & Stegarescu, 2002; Qiao, Martinez-Vazquez & Xu, 2002; Iimi, 2005). 반면에 재정분권의 부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학자들은 재정분권이 정부지출규모를 증가시키고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Enikolopov & Zhuravskaya, 2003; Berthold & Fricke, 2007; Rodriguez-Pose & Kroijer, 2009; Rodriguez-Pose & Ezcurra, 2010).

이처럼 재정분권의 효과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재정분권의 개념과 필요조건에 대한 인식이 학자들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즉, 재정분권의 개념이 무엇이며, 어떠한 조건 하에서 재정분권이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선행연구들은 서로 다른 재정분권 측정 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재정분권 수준을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 재정분권의 효과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초반까지의 연구들 중 대부분은 IMF에서 제공하는 GFS와 같은 전통적인 재정분권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정분권의 실제 모습,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 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즉, 많은 선행연구들(Davoodi & Zou, 1998; Zhang & Zou, 1998; Yilmaz, 1999; Lin and Liu, 2000; Akai & Sakata, 2002)이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반정부 세입(세출) 대비 지방정부 세입(세출)의 비중’을 재정분권 지표로써 사용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은 공공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자신

들의 과세권을 활용하여 자체수입을 일정 수준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세입(세출) 비중이 높다는 것이 반드시 지방정부의 높은 재정적 자율성 수준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많은 선행연구들이 집행상의 분권(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과 실질적인 분권(substantive decentralization)을 적절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Weingast(2009: 280-282)가 주장하는 것처럼 재정분권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게 재정적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이 보장되는 환경 하에서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지방정부 간 경쟁이 발생하며, 이러한 경쟁이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의 인도나 20세기 말의 멕시코 등과 같은 일부 국가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지방정부가 매우 제한적인 수준의 재정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원배분 효율성과 경제성장에 대한 재정분권의 긍정적 효과는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의 연구들은 재정분권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Jourmard & Kongsrud, 2003; Darby, Muscatelli & Roy, 2003; Vo, 2008, 2009). 이 연구 역시 재정분권과 지역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을 반영한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즉,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Vo(2008, 2009)가 제시한 '재정분권지수(fundamental index of fiscal decentralisation: FDI)'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을 고려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연구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첫째,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전통적 재정분권 지표와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을 고려한 Vo의 재정분권지수(FDI) 간의 비교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에 따라 재정분권의 효과성이 달라지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기존 재정분권 지표의 문제점을 보완한 Vo의 재정분권지수(FDI)를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재정분권의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고, 이를 통해 재정분권과 지역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재정분권과 지방정부의 자율성

재정분권에 관한 이론적·경험적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정분권의 효과성에 대한 일관된 결론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Oates(1972) 등의 학자들은 재정분권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Prud'homme(1995) 등의 학자들은 재정분권이 거시경제안정성을 저해하고 부패를 야기하며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학자들마다 재정분권의 개념과 필요조건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이며, 이들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재정분권의 효과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재정분권과 관련한 문제는 재정분권이 동태적(dynamic)이고 연속적인(continuous)인 개념이라는 사실에서 발생한다(Treisman, 2002: 3). 이러한 측면에서 재정분권은 '분권화된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고, '분권화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할 수도 있다. 또한 재정분권과 재정집권 사이의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라 재정분권 수준에 대한 측정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분권의 개념은 지방정부에 제공되는 권한과 책임성의 수준 및 그 방법에 따라 분산(deconcentration), 위임(delegation), 이양(devolution)의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홍근석, 2012: 11-12; Rondinelli, 1981: 137-139; Martinez-Vazquez & McNab, 1997: 1-3; Bird & Vaillancourt, 1998: 3; Litvack et al., 1998: 4-6).

이러한 3가지 방식 중에서 분산과 위임은 지방정부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인 수준의 자율성만을 인정하는 형태이며, 이로 인해 재정분권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분산은 중앙정부가 제공해야 할 공공서비스를 지방에 위치한 자신들의 하부기관을 통해 공급함으로써 효과성과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방식이며, 위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해야 하며, 지방정부에 위임된 권한과 책임성이 중앙정부에 의해 변경·소멸될 수 있다는 제약이 존재한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분산과 위임의 경우 의사결정자들은 지역 주민의 선호(preference)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선호에 반응하게 되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반면에 이양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세율 및 과세표준의 설정과 같은 보다 광범위한 재정적 자율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방정부가 향유하는 재정적 자율성은 헌법상의 권리와 같은 보다 영속적인 성격의 권리이다. 이양의 경우 지방정부들은 서비스 공급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조세 징수에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재량권을 보유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실질적인 재정분권은 단순한 재정적 권한의 지리적 분산이나 지방정부에 대한 제한적 권한위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즉, 재정분권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과세권과 지출 결정권을 지방정부에게 이양하고, 지방정부는 자신들의 권한에 대해 책임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분산·위임·이양은 서로 다른 수준의 재정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며(Meloche et al., 2004: 2),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 수준에 따라 재정분권의 효과성은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재정분권의 수준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 수준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는 많은 학자들은 개별 국가들마다 재정분권의 효과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방정부들은 복잡한 제도적 환경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각각 고유한 정치적·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의 차이는 경제성장에 미치는 재정분권의 영향을 다양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유사한 연방국가들 사이에서도 재정분권으로 인한 경제적 성과에서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는 개별 국가의 지방정부가 처해 있는 서로 다른 제도적 환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Litvack et al., 1998: 7; Weingast, 2009: 280).

이와 관련하여 Weingast(2009: 280-282)는 재정분권의 긍정적 효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5가지의 제도적 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분권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① 계층제(hierarchy), ② 지방정부의 자율성(subnational autonomy), ③ 공동 시장(common market), ④ 경성예산제약(hard budget constraints), ⑤ 제도화 된 권위(Institutionalized authority)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재정분권은 이러한 5가지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조건들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재정분권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게 된다.

위에 제시된 5가지 조건들 중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¹⁾은 특히 중요하다. Tiebout(1972), Oates(1972), Brennan & Buchanan(1980) 등의 재정연방주의 학자들은 재정분권이 지방정부 간 경쟁을 야기하며, 이러한 경쟁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만든다고 주장한다. 지방정부 간 경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수의 제도적 조건들을 필요로 하며, 특히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들은 지역의 시장경제를 규제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공재 및 서비스를 공급하며, 세율을 설정하기 위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재정분권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 중 일부²⁾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이로 인해 재정

1)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성은 낮은 수준이다. 2003년 이후 추진된 재정분권 노력을 통해 세출분권 수준은 어느 정도 높아졌지만, 세입분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김의섭, 2011: 113-114).

분권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편익을 침해하게 된다.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 또는 정책 선택 권한의 부재는 지방정부의 경쟁을 약화시키며,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능력을 제약한다. 이러한 경우 재정분권은 시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Weingast, 2009: 281-282).

2.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

재정분권에 관한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재정분권과 경제적 효율성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최근까지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전통적인 시각에서 재정분권은 경제적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Oates(1972)는 분권화의 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를 통해 재정분권이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서로 다른 선호를 가지고 있으며, 이처럼 이질적인 선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공공재 및 서비스의 공급은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Oates(1972: 35)는 “공공서비스의 단위당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중앙정부가 모든 지역에 대해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 각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적절한 양을 자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거나 최소한 같은 정도의 효율성을 나타낸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최근에는 재정분권이 경제적 효율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특수한 환경과 지역 주민의 선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정책이 지역적 차이를 무시하고 집권적으로 결정된 정책보다 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공공재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지방정부 간 경쟁을 통해 재정분권은 공공재의 공급에 있어서 정태적 효율성과 동태적 효율성 모두를 향상시킬 수 있다. 즉, 재정분권의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분권화의 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가 정태적인 맥락(static context)에서 개발된 것이기는 하지만, 경제성장과 같은 역동적인 환경

2) 이러한 국가의 예로는 1990년대 중반의 인도, 20세기 말의 멕시코, 푸틴 체제 하의 러시아 등을 들 수 있다. 인도의 경우 중앙정부가 대부분의 중요한 정책결정을 수행하였으며, 지방정부의 낮은 재정적 자율성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Weingast, 2009: 282). 또한 Thomson(2006) 등의 학자들은 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이 재정분권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들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인 수준의 재정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정분권 개혁이 실패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dynamic setting)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Oates, 1972: 13; Oates, 1993: 240).

재정분권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초기의 관심사는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중 어떠한 것이 선행요인 또는 영향요인인지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초기의 연구들은 경제성장이 재정분권을 야기한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재정분권과 1인당 소득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는 다수의 연구들(Oates, 1972; Kee, 1977; Pommerehne, 1977; Bahl & Nath, 1986; Wasylenko, 1987)은 두 변수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재정분권이 저개발국가보다 선진국에서 보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Martinez-Vazquez & McNab, 1997: 7).

그리고 Bahl & Linn(1992)의 연구에서는 재정분권이 경제의 성숙이나 소득수준 향상 등과 같은 경제발전의 결과물이며,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재정분권이 나타난다고 제시하였다. Panizza(1998)의 연구 역시 재정집권과 경제성장 사이에 부(-)의 상관관계, 즉 보다 부유한 국가들이 보다 빈곤한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덜 집권화된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가 경제성장에서 재정분권의 방향(경제성장 → 재정분권)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보다 최근의 연구들은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사이의 인과관계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재정분권이 원인변수이고, 경제성장이 결과변수라는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Davoodi & Zou(1998), Zhang & Zou(1997, 1998), Davoodi, Xie, & Zou(1999) 등은 '대표 대리인 모형³⁾(representative agent modeling approach)'을 사용하여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학자들은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재정분권 수준이 존재하며, 최적의 재정분권 수준은 개별 정부의 상대적인 생산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가정하고 있다.

또한 Lin & Liu(2000)는 Solow(1956)의 '신고전주의 경제성장모형(neoclassical model of economic growth)'을 사용하여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재정분권, 재정력, 자본투자 등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개인의 선호에 대한 선택적인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재정분권이 1인당 소득 증가율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McNab, 2001: 46).

3) 그러나 대표 대리인 모형은 모든 대리인의 선호가 동질적이며, 개인의 선호가 전체 지역 주민의 선호의 총합을 대신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정책이 변화된 이후에도 개인의 선택이 전체 지역 주민의 선택의 총합과 일치한다고 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즉, 소수의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추진되는 경우, 대표 대리인 모형은 잘못된 결론을 야기할 수 있다(Kirman, 1992: 118).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유형의 연구들은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지, 아니면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있다. 재정분권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학자들(Gurgur & Shah, 2000; Fisman & Gatti, 2002; Akai & Sakata, 2002; Martinez-Vazquez & McNab, 2003; Arikian, 2004)은 재정분권을 공공지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거시경제안정성을 강화하며, 부패를 감소시키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재정분권의 부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학자들(Conyers, 1990; Tanzi, 1996; Rodden, 2002; Bardhan & Mookherjee, 2002; Rodden, Eskeland & Litvack, 2003)은 재정분권이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를 보다 심화시키고, 부패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거시경제안정성을 감소시키고,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한다(홍근석, 2012: 3).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의 영향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선행연구들이 재정분권의 실제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많은 선행연구들은 단순히 일반정부 수입(지출) 대비 지방정부 수입(지출)의 비율로써 재정분권을 측정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분권 지표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이나 정부 간 이전재원의 영향과 같은 정부재정 활동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재정분권의 수준을 과대추정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Ebel & Yilmaz, 2002: 6-7).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재정분권과 지역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 정도를 반영한 V_0 의 재정분권지수(FDI)를 사용하고 있다.

3. 선행연구 분석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는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 많이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를 중심으로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재정분권 지표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최병호·정종필(2000)의 연구는 1986년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 동안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분권과 지역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세출분권의 측면에서 재정분권을 측정하였으며, 일반정부의 지출 대비 지방정부의 지출 비율을 사용하고 있다. 분석결과 세출분권은 지역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광역시와 도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광역시의 경우 세출분권이 지역경제성장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반면, 도의 경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경우 재정분권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립성 수준(degree of fiscal self-reliance)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경험적 분석에 사용된 재정분권 지표는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또한 최병호·정종필(2001)의 연구는 1990년부터 1999년까지의 기간 동안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에 사용된 개별적인 재정분권 지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정분권에 관한 종합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즉, 세입분권 측면의 2개 지표, 세출분권 측면의 2개 지표, 재정자립도 측면의 1개 지표 등 총 5개 지표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재정분권을 측정하기 위한 종합지표를 도출하였다. 종합지표를 이용한 분석결과 재정분권은 지역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 역시 재정분권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Martinez-Vazquez & Timofeev(2009: 18)가 제시하는 것처럼 서로 상이한 분권의 범주를 하나의 지표로 통합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정보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용모(2004)의 연구는 1991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의 2가지 지표를 사용하여 재정분권을 측정하였다. 세입분권의 경우 중앙정부의 조세 수입 대비 탄력세율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입의 비율을 사용하였으며, 세출분권의 경우에는 무조건부보조금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세출 대비 조건부보조금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의 비율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세입분권은 지역경제성장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세출분권은 지역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세입분권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탄력세율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지방세 항목을 고려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최병호(2007: 145)의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 탄력세율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재정분권 지표 역시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 정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권오성 외(2007)의 연구는 1996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 동안 20개 국가를 대상으로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의 측면에서 재정분권을 측정하였다. 먼저 세입분권은 일반정부의 수입 대비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제외한 지방정부의 수입 비율로 측정하였으며, 세출분권은 일반정부의 지출 대비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제외한 지방정부의 지출 비율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선진국의 경우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경우에도 전통적인 재정분권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김현아(2007)의 연구는 1990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세출분권의 측면에서 재정분권을 측정하였으며, 일반정부의 지출 대비 지방정부의 지출 비율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세출분권은 지역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재정분권 지표는 중앙정부 이전재원의 영향을 분리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저자는 지역경제성장이 재정분권으로 인한 효율성의 증가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제시하고 있다.

임성일(2008)의 연구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분권과 지역경제성장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세입분권, 세출분권, 그리고 조세분권 등 3가지 지표를 사용하여 재정분권을 측정하였다. 즉, 재정분권은 지방정부의 총 수입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 일반정부 지출 대비 지방정부 지출 비율, GRDP 대비 지방세 수입 비율로 측정되었다. OLS 분석결과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은 지역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조세분권은 지역경제성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패널 분석결과에서는 3개의 지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며, 세입분권과 조세분권의 경우에는 부호가 상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최원익(2008)의 연구는 1993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분권과 지역경제성장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의 측면에서 재정분권을 측정하였으며, 각각 2가지의 세부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세입분권은 일반정부의 수입 대비 지방정부의 수입 비율과 일반정부의 수입 대비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을 제외한 지방정부의 수입 비율로 측정하였다. 세출분권 역시 일반정부의 지출 대비 지방정부의 지출 비율과 일반정부의 지출 대비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을 제외한 지방정부의 지출 비율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4개의 지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의 영향을 고려한 재정분권 지표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재정분권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저자가 연구의 한계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 정도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주운현·홍근석(2011)의 연구는 1995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광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의 측면에서 재정분권을 측정하였으며, 최원익(2008)의 연구와 유사하게 각각 2가지의 세부지표를 사용하였다. 즉, 기존 선행연구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통적 세입·세출분권 지표와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세입·세출분권 지표를 통해 재정분권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전통적 세입분권 지표(세입분권1)는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세입분권 지표(세입분권2)는 경제성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분권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경우에도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표 1> 선행연구의 검토

학자	데이터	대상	재정분권지표	주요결과
최병호·정종필(2000)	1986-1997년 (12년)	광역	• 세출분권(전통적 세출분권 지표)	• 정(+)의 영향
최병호·정종필(2001)	1990-1999년 (10년)	광역	• 재정분권 종합지표(요인분석 실시)	• 부(-)의 영향
이용모(2004)	1991-2000년 (10년)	광역	• 세입분권(탄력세율제도 고려) • 세출분권(보조금 고려)	• 세입분권 : 부(-)의 영향 • 세출분권 : 영향 없음
권오성 외 (2007)	1996-2004년 (9년)	20개 국가	• 세입분권(보조금 고려) • 세출분권(보조금 고려)	* 선진국 - 2개 지표 모두 정(+)의 영향 * 개발도상국 - 2개 지표 모두 영향 없음
김현아(2007)	1990-2003년 (14년)	기초/ 광역	• 세출분권(전통적 세출분권 지표)	- 정(+)의 영향
임성일(2008)	2002-2006년 (5년)	광역	• 세입분권(지방정부 총 수입 대비 자체수입 비율) • 세출분권(전통적 세출분권 지표) • 조세분권(GRDP 대비 지방세 비율)	* OLS 분석결과 - 세입분권: 정(+)의 영향 - 세출분권: 정(+)의 영향 - 조세분권: 부(-)의 영향 * 패널 분석결과 - 3개 지표 모두 영향 없음
최원익(2008)	1993-2003년 (11년)	광역	• 세입분권1(전통적 세입분권 지표) • 세입분권2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고려) • 세출분권1(전통적 세출분권 지표) • 세출분권2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고려)	- 4개 지표 모두 영향 없음
주운현·홍근석(2011)	1995-2009년 (15년)	광역	• 세입분권1(전통적 세입분권 지표) • 세입분권2(국고보조금 고려) • 세출분권1(전통적 세출분권 지표) • 세출분권2(국고보조금 고려)	- 세입분권1: 영향 없음 - 세입분권2: 정(+)의 영향 - 세출분권1: 영향 없음 - 세출분권2: 정(+)의 영향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연구들은 대부분 일반정부의 수입(지출) 대비 지방정부의 수입(지출) 비율이라는 전통적 재정분권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연구들의 경우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을 제외한 재정분권 지표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지표들도 재정분권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을 고려한 V_0 의 재정분권지수(FDI)와 전통적 재정분권 지표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 정도에 따라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재정분권의 영향이 달라지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Ⅲ. 방법론

1. 재정분권 측정지표

많은 선행연구들은 재정분권을 일반정부의 세입(세출) 대비 지방정부의 세입(세출) 비중으로써 측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Oates(1972)는 재정분권 측정지표로써 일반정부의 세입(세출) 대비 하위정부의 세입(세출) 비중을 사용하였으며, Woller & Phillips(1998)는 재정분권의 측정지표로써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 ① 일반정부 수입 대비 지방정부 수입의 비중
- ② 일반정부 수입 대비 이전재원을 제외한 지방정부 수입의 비중
- ③ 일반정부 지출 대비 지방정부 지출의 비중
- ④ 국방비와 사회보장비를 제외한 일반정부 지출 대비 지방정부 지출의 비중

이와 유사한 재정분권 지표는 Davoodi & Zou(1998), Zhang & Zou(1998), Yilmaz(1999), Lin and Liu(2000), Akai & Sakata(2002), Thießen(2003) 등 많은 선행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분권 지표들은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재정분권의 실제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Ebel & Yilmaz, 2002: 6; Meloche et al., 2004: 4; Vo, 2009: 400).

이러한 측면에서 Vo(2008)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새로운 재정 분권지수(FDI)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특정 국가에 p 개의 지방정부가 존재한다고 할 때 $i = 1, 2, \dots, p$ 로 나타낼 수 있으며, 개별 지방정부의 지출과 자체수입은 각각 E_i 와 OSR_i 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전체 공공부문의 지출은 TE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을 제외한 전체 지방정부의 지출 E 와 중앙정부의 지출을 포함하는 것이다. 재정분권지수(FDI)의 첫 번째 구성요소인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fiscal autonomy)은 지방정부의 지출 중에서 자체수입에 의해 재원이 조달되는 비율을 의미하며, 지방정부의 총 지출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OSR/E)로 측정된다. 두 번째 구성요소인 지방정부의 재정적 중요성(fiscal importance)은 지방정부에 의해 수행되는 전체 공공부문의 지출 비율을 의미하며, 전체 공공부문 지출 대비 전체 지방정부의 지출(E/TE)로 측정된다. 마지막으로 재정분권지수(FDI)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과 재정적 중요성에 대한 기하평균으로 측정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DI = \sqrt{\left(\frac{OSR}{E}\right) \times \left(\frac{E}{TE}\right)} \quad 4)$$

2. 분석모형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사이의 직접적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형은 Davoodi & Zou(1998)와 Zhang & Zou(1998) 등이 사용한 대표 대리인 모형과 Mankiw, Romer & Weil(1992), Islam(1995), McNab(2001)등이 사용한 신고전학과 경제성장모형 등이 있다. 그러나 대표 대리인 모형은 대리인의 선호가 동질적이라고 가정하며, 재정분권과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간접적 효과를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신고전학과 경제성장모형은 재정분권의 간접적 효과를 모형에 포함하며, 이를 통해 재정분권의 다양한 효과들 사이의 잠재적 상충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연구는 재정분권, 거시경제안정성, 지역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통해 재정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신고전학과 경제성장모형⁵⁾을 통해 재정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분석모형

4) $OSR = \sum_{i=1}^p OSR_i$ 은 전체 지방정부의 자체수입, $E = \sum_{i=1}^p E_i$ 는 전체 지방정부의 지출, TE 는 전체 공공부문의 지출을 의미한다.

5) 분석모형에 대한 설명은 이용모(2004)와 Martinez-Vazquez & McNab(2006)의 연구를 참조하였으며, 홍근석(2012)에서 재인용하여 작성하였다.

은 다음과 같이 도출될 수 있다.

$$Y_{it} = V_{it} K_{it}^{\alpha} G_{it}^{\beta} H_{it}^{\gamma} L_{it}^{\delta} \dots\dots\dots (1)$$

주: $\alpha, \beta, \gamma, \delta > 0$ 이며, $\alpha + \beta + \gamma + \delta \geq 1$.

여기서 i 는 국가를 의미하고, t 는 년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Y_{it} 는 각 년도의 경제내총생산, V_{it} 는 기술수준 및 제도적 요소, L_{it} 는 노동투입량, G_{it} 는 공공고정자본, K_{it} 는 민간고정자본, H_{it} 는 인적자본을 의미한다. 그리고 V_{it}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Martinez-Vazquez & McNab, 2006: 27-30).

$$V_{it} = A_{it} D_{it} MS_{it} \dots\dots\dots (2)$$

A_{it} 는 기술수준, D_{it} 는 재정분권 수준, MS_{it} 는 거시경제안정성의 수준을 의미한다. 거시경제안정성은 또한 재정분권과 다른 설명변수들의 함수로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MS_{it} = g(D_{it}, X_{it}^1) \dots\dots\dots (3)$$

여기서 X^1 은 시간에 따른 거시경제안정성의 변화를 설명하는 설명변수들로 구성된 벡터를 의미하며, 이론적 간명성을 위해 재정분권이 X^1 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한 경제의 총생산은 재생가능한 자본의 축적, 노동증가율, 기술수준 및 다른 제도적 요소, 그리고 재정분권의 직·간접적 영향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수식 (2)를 수식 (1)에 대입하여 자연로그를 취하고, 양변을 미분하면 경제내총생산 증가율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ln \dot{Y}_{it} = \ln \dot{A}_{it} + \ln \dot{D}_{it} + \ln \dot{MS}_{it} + \alpha \ln \dot{K}_{it} + \beta \ln \dot{G}_{it} + \gamma \ln \dot{H}_{it} + \delta \ln \dot{L}_{it} \dots\dots\dots (4)$$

성장방정식 (6)에 의하면 한 경제내총생산 증가율은 기술수준증가율, 재정분권 수준의 변화, 거시경제안정성의 변화, 민간·공공·인적자본투자율, 노동증가율에 의해 결정된다.

3. 분석대상 및 변수설정

이 연구는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995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동안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지역경제성장률이며, 설명변수는 거시경제안정성, 지역별 투입요인(노동, 물적 자본, 인적자본), 재정분권 변수(전통적 재정분권 지표, V_0 의 재정분권지수), 조세부담률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수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인 지역경제성장률(Y)은 각 시·도별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로 측정되었다. 지역경제성장의 가장 대표적인 변수는 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이며(김현아, 2007: 7),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을 통해 지역경제성장을 측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 역시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설명변수 중에서 거시경제안정성(MS)은 각 시·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로 측정되었다. Fischer(1993: 3-6)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안정성의 지표로 인플레이션을, 예산수지적자, 암시장 외환 프리미엄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거시경제안정성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인플레이션율이며(McNab, 2001: 92), 인플레이션은 투자와 생산성 향상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부(-)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주운현·홍근석, 2011: 243).

<표 2> 변수의 출처와 조작적 정의

변 수		조작적 정의	출 처
지역경제성장률(Y)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성장률	통계청 홈페이지
거시경제안정성(MS)		시·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통계청 홈페이지
공공투자(PUB)		$\ln(\text{시·도별 투자적 경비 지출액})$	지방재정연감
민간투자(PRIV)		$\ln(\text{시·도별 광공업부문 유형고정자산 투자액})$	통계청 홈페이지
인적자본투자(HUMAN)		시·도별 전문대 이상 재학생/시·도별 경제활동인구 $\times 100$	교육통계연보 통계청 홈페이지
노동투입량(LABOR)		$\ln(\text{시·도별 경제활동인구})$	통계청 홈페이지
조세부담률(TAX)		시·도별 조세징수액/시·도별 지역내총생산 $\times 100$	지방재정연감 국세통계연보 통계청 홈페이지
전통적 재정분권 지표	세입(FDR)	시·도별 세입 결산액/일반정부 세입 결산액 $\times 100$	지방재정연감 국세통계연보
	세출(FDE)	시·도별 세출 결산액/일반정부 세출 결산액 $\times 100$	지방재정연감 국세통계연보

변 수		조작적 정의	출 처
	혼합(CI)	$[(\text{세입(FDR)} + \text{세출(FDE)})]/2$	지방재정연감 국세통계연보
V ₀ 의 재정분권 지수	자율성(FA)	시·도별 자체수입 결산액/시·도별 세출 결산액×100	지방재정연감
	중요성(FI)	(시·도별 세출 결산액-보조금)/일반정부 세출 결산액×100	지방재정연감 국세통계연보
	재정분권지수(FDI)	$\sqrt{FA \times FI}$	지방재정연감 국세통계연보

이외의 변수들 중에서 지역별 투입요인으로는 공공투자(PUB), 민간투자(PRIV), 인적자본투자(HUMAN), 노동투입량(LABOR)을 사용하였다. 공공투자는 각 시·도별 투자적 경비 지출액(일반회계 순계 규모)을 사용하였으며, 민간투자는 각 시·도별 광공업부문 고정자산의 연간 총 투자액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인적자본투자는 각 시·도별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전문대학 이상에 재학 중인 학생의 비율을 사용하였다. 노동투입량은 시·도별 경제활동인구로 측정하였으며, 15세 이상 취업자와 실업자의 수를 더한 값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조세부담률(TAX)은 시·도별 내국세 징수액과 지방세 징수액의 합계를 지역내총생산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정분권 변수는 크게 전통적 재정분권 지표와 V₀의 재정분권지수(FDI)로 구분하였다. 전통적 재정분권 지표 중 세입분권(FDR)은 일반정부 수입 대비 지방정부의 수입 비중으로 측정되었으며, 세출분권(FDE)은 일반정부 지출 대비 지방정부의 지출 비중으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혼합지표(CI)는 전통적 세입분권 지표와 전통적 세출분권 지표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V₀의 재정분권지수(FDI)는 재정적 자율성(FA), 재정적 중요성(FI), 재정분권지수(FDI)로 구분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에서 제시하였다.

IV. 분석결과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재정분권 지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정적 자율성과 재정적 중요성의 개념을 반영한 V₀의 재정분권지수(FDI)를 제시하고 있다.

1. 전통적 재정분권 지표의 분석결과

전통적인 재정분권 지표를 활용하여 재정분권과 지역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전통적 세입분권 지표를 적용한 모형 (1)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Hausman 검정 결과 $\chi^2(6)$ 값이 4.67($p>.05$)로 고정효과모형보다 확률효과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Breusch-Pagan 검정 결과 $\chi^2(1)$ 값이 98.69($p<.01$), Wooldridge 통계량 검정 결과 $F(1, 15)$ 값이 32.566($p<.01$)으로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FGLS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1)에서 재정분권과 지역경제성장 사이에는 부(-)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즉, 전통적 세입분권 지표를 적용한 모형 (1)의 분석결과 재정분권은 지역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 중에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과 조세부담률은 지역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플레이션이 투자와 생산성 향상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부(-)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Fischer (1993: 3-6)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공공투자, 민간투자, 인적자본투자, 노동투입량은 지역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세출분권 지표를 적용한 모형 (2)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Hausman 검정 결과 $\chi^2(6)$ 값이 4.83($p>.05$)으로 고정효과모형보다 확률효과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Breusch-Pagan 검정 결과 $\chi^2(1)$ 값이 101.67($p<.01$), Wooldridge 통계량 검정 결과 $F(1, 15)$ 값이 29.789($p<.01$)로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FGLS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2)의 경우에도 재정분권과 지역경제성장 사이에 부(-)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즉, 전통적 세출분권 지표를 적용한 모형 (2)의 분석결과 재정분권은 지역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 중에서 노동투입량은 지역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과 조세부담률은 지역경제성장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투자, 민간투자, 인적자본투자는 지역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재정분권과 지역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분석결과(전통적 재정분권 지표)

구 분	전통적 세입분권 지표(1)	전통적 세출분권 지표(2)	혼합 지표(3)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2.1058*** (0.1570)	-2.0996*** (0.1560)	-2.1036*** (0.1560)
공공투자	-0.4588 (0.3130)	-0.4269 (0.3109)	-0.4472 (0.3120)
민간투자	-0.2645 (0.3124)	-0.2278 (0.3131)	-0.2298 (0.3137)
인적자본투자	0.0961 (0.0972)	0.0895 (0.0976)	0.0916 (0.0974)
노동투입량	1.1805 (0.9010)	1.3298* (0.7234)	1.4750* (0.8600)
조세부담률	-0.7170*** (0.2516)	-0.7051*** (0.2490)	-0.6950*** (0.2510)
재정분권	-0.5654 (0.5603)	-0.6895 (0.4237)	-0.7791 (0.5275)
상수항	8.1571 (6.3727)	7.0194 (5.4020)	6.1914 (6.1559)

주: 1) ()의 값은 표준오차이며, * : $p < .10$, ** : $p < .05$, *** : $p < .01$ 을 의미함.

2) 종속변수: 경제성장률(Y).

전통적 세입·세출분권 지표를 결합하여 혼합 지표를 도출하였으며, 혼합 지표를 적용한 모형 (3)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Hausman 검정 결과 $\chi^2(7)$ 값이 5.99($p > .05$)로 고정효과 모형보다 확률효과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Breusch-Pagan 검정 결과 $\chi^2(1)$ 값이 99.86($p < .01$), Wooldridge 통계량 검정 결과 $F(1, 15)$ 값이 31.304 ($p < .01$)로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FGLS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3)의 경우에도 재정분권은 지역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의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노동투입량은 지역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과 조세부담률은 지역경제성장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공공투자, 민간투자, 인적자본투자는 지역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재정분권지수(FDI)의 분석결과

다음으로 재정적 자율성의 개념을 반영한 V_0 의 재정분권지수(FDI)를 활용하여 재정분권과 지역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V_0(2009)$ 가 제시한 재정적 자율성 지표를 적용한 모형 (4)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Hausman 검정 결과 $\chi^2(7)$ 값이 5.90($p > .05$)으로 고정효과모형보다 확률효과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Breusch-Pagan 검정 결과 $\chi^2(1)$ 값이 100.86($p < .01$), Wooldridge 통계량 검정 결과 $F(1, 15)$ 값이 29.958($p < .01$)로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FGLS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4)에서 재정분권은 지역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분권의 계수 값은 0.5831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재정분권이 1% 증가하면 0.58%의 지역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 제시된 3가지 모형과는 달리 모형 (4)의 재정분권 지표는 재정분권 수준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을 고려하고 있다. 전통적 재정분권 지표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을 고려한 모형 (4)의 경우에는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경우, 재정분권은 지역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다른 변수들 중에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과 조세부담률은 지역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공공투자, 민간투자, 인적자본투자, 노동투입량은 지역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_0(2009)$ 가 제시한 재정적 중요성 지표를 적용한 모형 (5)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Hausman 검정 결과 $\chi^2(6)$ 값이 4.81($p > .05$)로 고정효과모형보다 확률효과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Breusch-Pagan 검정 결과 $\chi^2(1)$ 값이 101.64($p < .01$), Wooldridge 통계량 검정 결과 $F(1, 15)$ 값이 29.806($p < .01$)으로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FGLS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5)에서 재정분권과 지역경제성장 사이에는 부(-)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즉, 재정적 중요성 지표를 적용한 모형 (5)의 분석결과 재정분권은 지역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 중에서 노동투입량은 지역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과 조세부담률은 지역경제성장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투자, 민간투자, 인적자본투자는 지역경제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재정분권과 지역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분석결과(Vo의 재정분권지수)

구 분	재정적 자율성 지표(4)	재정적 중요성 지표(5)	재정분권 지수(6)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2.0999*** (0.1573)	-2.0999*** (0.1560)	-2.6454*** (0.1716)
공공투자	-0.3802 (0.3085)	-0.4270 (0.3109)	0.4473 (0.3678)
민간투자	-0.3123 (0.3069)	-0.2274 (0.3131)	-0.2521 (0.3466)
인적자본투자	0.1060 (0.0967)	0.0895 (0.0976)	0.2456 (0.1625)
노동투입량	0.1943 (0.4138)	1.3350* (0.7239)	12.7402** (6.4482)
조세부담률	-0.8290*** (0.2457)	-0.7053*** (0.2489)	-1.9814*** (0.6211)
재정분권	0.5831** (0.2938)	-0.6906 (0.4225)	2.2774*** (0.4442)
상수항	13.8707*** (3.8512)	6.9884 (5.4038)	-93.5934*** (34.2357)

주: 1) ()의 값은 표준오차이며, * : $p < .10$, ** : $p < .05$, *** : $p < .01$ 을 의미함.
2) 종속변수: 경제성장률(Y).

마지막으로 Vo(2009)가 제시한 재정분권지수(FDI)를 적용한 모형 (6)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Hausman 검정 결과 $\chi^2(7)$ 값이 25.25($p < .01$)로 확률효과모형보다 고정효과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Breusch-Pagan 검정 결과 $\chi^2(1)$ 값이 107.21($p < .01$), Wooldridge 통계량 검정 결과 $F(1, 15)$ 값이 23.294($p < .01$)로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FGLS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6)에서 재정분권은 지역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분권의 계수 값은 2.2774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재정분권이 1% 증가하면 약 2.28%의 지역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모형 (4)와 동일한 것이며,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가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이 담보되는 경

우, 재정분권은 지역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나타내게 된다. 다른 변수들 중에서 노동투입량은 지역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과 조세부담률은 지역경제성장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공투자, 민간투자, 인적자본투자는 지역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이 연구는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을 수반하는 실질적 재정분권의 중요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1995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동안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패널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전통적 재정분권 지표를 사용한 모형의 경우 재정분권은 지역경제성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부(-)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즉,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지방정부의 세입(세출) 비중으로 재정분권을 파악하는 경우 재정분권과 지역경제성장 사이에는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세입분권 지표와 세출분권 지표를 동시에 고려한 혼합 지표의 경우에도 재정분권과 지역경제성장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V_0 의 재정분권지수(FDI)를 사용한 모형의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을 고려하는 경우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재정적 자율성 지표를 사용한 모형의 경우 재정분권이 1% 증가할 때, 지역경제성장률은 0.5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정분권 지수를 사용한 모형의 경우 재정분권이 1% 증가할 때, 지역경제성장률은 2.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석결과 전통적 재정분권 지표와 V_0 의 재정분권지수(FDI)는 지역경제성장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분권의 개념과 측정지표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 재정분권 지표는 지방정부의 자체수입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을 포함하여 재정분권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즉, 전통적 재정분권 지표를 사용하는 경우 지방정부가 세입·세출 상의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재원까지 포함하여 재정분권 수준을 측정하기 때문에, 실제 보다 지방정부의 재정분권 수

준을 과다추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에 반해 V_0 의 재정분권지수(FDI)는 세입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자체수입만을 반영하고, 세출 측면에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을 제외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정적 자율성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V_0 의 재정분권지수(FDI)는 전통적 재정분권 지표에 비해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재정분권은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통적 재정분권 지표와 V_0 의 재정분권지수(FDI)의 분석결과에 대한 비교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Litvack et al.(1998: 7)이 지적하는 것처럼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의 여부는 재정분권을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의 적절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즉, 재정분권이 지방정부에게 세입·세출에 대한 실질적인 자율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재정분권은 지방정부 간 경쟁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과거 많은 개발도상국의 사례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지방정부에게 매우 제한적인 재정적 권한만이 인정되고 지방정부 지출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의존하게 된다면, 재정분권은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지역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재정분권이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 보장, 공동 시장의 존재, 경성 예산제약, 제도화 된 권위, 정부 간 이전재원 시스템의 구축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은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경제적 성과에 대한 재정분권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오성·배인명·주운현. (2007). 재정분권화가 Panacea인가?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 김의섭. (2011).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 참여정부 이후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재정정책논집』, 13(2): 113-148.
- 김현아. (2007). 재정분권과 지역소득. 『재정논집』, 21(2): 1-21.
- 우명동. (2008). 참여정부 재정분권정책의 성격에 관한 소고. 『지방재정논집』, 13(1): 125-164.
- 이용모. (2004). 한국의 재정분권화가 거시경제의 안정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보』, 13(3): 89-116.
- 임성일. (2008). 재정분권과 성장: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재정분권 정책수단의 모색. 『응용경제』, 10(2): 35-73.
- 주운현·홍근석. (2011).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거시경제안정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5(3): 235-256.
- 최병호. (2007). 재정분권의 이론과 적정한 지방재정의 구조 모색. 『지방재정논집』, 12(1): 129-160.
- 최병호·정종필. (2000). Fiscal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n Korea. 『경제학논집』, 9(1): 105-126.
- 최병호·정종필. (2001). 재정분권화와 지역경제성장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재정분권화 지표의 개발과 실증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6(2): 177-202.
- 최원익. (2008). 재정분권화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3): 89-107.
- 홍근석. (2012). 「재정분권이 정부지출규모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OECD 회원 국가를 대상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kai, N. and M. Sakata. (2002). Fiscal Decentralization Contributes to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State-Level Cross-Section Data for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Urban Economics*, 52: 93-108.
- Arikan, G. G. (2004). Fiscal Decentralization: A Remedy for Corruption? *DELTA Working Papers*.
- Bahl, R. and J. Linn. (1992). *Urban Public Finance in Developing Countr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ahl, R. and S. Nath. (1986). Public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in Developing

- Economies. *Government and Policy*, 4: 405-418.
- Bardhan, P. and D. Mookherjee. (2002). Capture and Governance at the Local and National Levels. *American Economic Review*, 90(2): 135-139.
- Behnisch, A., T. Buttner. and D. Stegarescu. (2002). Public Sector Centralization and Productivity Growth: Reviewing the German Experience. *ZEW Discussion Paper*, 02-03. Mannheim.
- Berthold, N. and H. Fricke. (2007). Volkswirtschaftliche Auswirkungen der Finanziellen Ausgleichssysteme in Deutschland. *Discussion Paper*, 93. University of Wurzburg.
- Bird, R. and F. Vaillancourt. (1998). *Fiscal Decentraliz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Brennan, G. and J. Buchanan. (1980). *The Power to Tax: Analytical Foundations of a Fiscal Constit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ueckner, J. (2006). *Fiscal Federalism and Economic Growth*. Mimeo.
- Conyers, D. (1990). Centralization and Development Planning: A Comparative Perspective. in P. de Valk and K. Wekwete. (eds). *Decentralizing for Participatory Planning?* Aldershot: Avebury.
- Darby, J., R. Muscatelli and G. Roy. (2003). Fiscal decentralization in Europe: A review of recent experience. in: J. Monnesland(Ed.), *Regional Public Finance: European Research in Regional Science*. vol. 13, Pion, London.
- Davoodi, H. and H. Zou. (1998).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A Cross-Country Study. *Journal of Urban Economics*, 43(2): 244-257.
- Davoodi, H., D. Xie. and H. Zou. (1999).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Urban Economics*, 45(2): 228-239.
- Ebel, R. and S. Yilmaz. (2002). On the Measurement and Impa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2809. Washington, D.C.: World Bank.
- Enikolopov, R. and E. Zhuravskaya. (2003). Decentralization and Political Institutions. *CEPR Discussion Paper*, 3857.
- Fischer, S. (1993). The Role of Macroeconomic Factor in Growth.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4565.
- Fisman, R. and R. Gatti. (2002). Decentralization and Corruption: Evidence across Countri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3: 325-345.
- Gurgur, T. and A. Shah. (2000). *Localization and Corruption: Panacea or Pandora's Box*. Presented at the IMF Conference on Fiscal Decentralization. Washing D.C.
- Iimi, A. (2005).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Revisited: An Empirical

- Note. *Journal of Urban Economics*, 57: 449-461.
- Islam, N. (1995). Growth Empirics: A Panel Data Approac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0(4): 1127-1170.
- Kee, W. (1977).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Public Finance Quarterly*, 5(1): 79-97.
- Kirman, A. (1992). Whom or What Does the Representative Individual Represen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6(2): 117-136.
- Lin, J. Y. and Z. Liu. (2000).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in China.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49(1): 1-22.
- Litvack, J., J. Ahmad and R. Bird. (1998). Rethinking Decentralization in the Developing Countries. *Discussion Paper*. Washington, D.C.: World Bank.
- Mankiw, N. G., D. Romer. and D. N. Weil. (1992). A Contribution to the Empirics of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2): 407-437.
- Martinez-Vazquez, J. and R. McNab. (1997). Fiscal Decentralization, Economic Growth, and Democratic Governance. *International Studies Program Working Paper*, 97-7. Georgia State University.
- Martinez-Vazquez, J. and R. McNab. (2003).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World Development*, 31(9): 1597-1616.
- Martinez-Vazquez, J. and R. McNab. (2006). Fiscal Decentralization, Macrostability, and Growth. *Revista de Economia Publica*, 179: 25-49.
- Martinez-Vazquez, J. and A. Timofeev. (2009). Decentralization Measures Revisited. *International Studies Program Working Paper*, 09-13. Georgia State University.
- McNab, R. (2001).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Outcomes of Fiscal Decentralization*. Doctoral Dissertation, Georgia State University.
- Meloche, J., F. Vaillancourt and S. Yilmaz. (2004). Decentralization or Fiscal Autonomy? What Does Really Matter? Effect on Growth and Public Sector Size in European Transition Countrie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3254. Washington, D.C.: World Bank.
- Oates, W. (1972). *Fiscal Federalism*.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Oates, W. (1993).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National Tax Journal*, 46(2): 237-243.
- Olson, M. (1969). The Principle of 'Fiscal equivalence': The Division of Responsibilities among Different Levels of Govern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59(2): 479-487.

- Panizza, U. (1998). Income Inequality and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American Data. *Working Paper*. Washington, D.C.: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Pommerehne, W. (1977). Quantitative Aspects of Federalism: A Study of Six Countries. In Oates, W.(ed.) *The Political Economy of Fiscal Federalism*. Lexington, MA: DC Heath.
- Prud'homme, R. (1995). On the Dangers of Decentralization. *The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10(2): 201-220.
- Qiao, B., J. Martinez-Vazquez, and Y. Xu. (2002). Growth and Equity Tradeoff in Decentralization Policy: China's Experience. *International Studies Program Working Paper*, 02-16. Georgia State University.
- Rodden, J. (2002). The Dilemma of Fiscal Federalism: Grants and Fiscal Performance Around the World.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3): 670-687.
- Rodden, J., G. S. Eskeland, and J. Litvack. (2003). *Fiscal Decentralization and the Challenge of Hard Budget Constraints*. Cambridge and London: MIT Press.
- Rodriguez-Pose, A. and R. Ezcurra. (2010). Is Fiscal Decentralization Harmful for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the OECD Countries.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1(4): 619-643.
- Rodriguez-Pose, A. and A. Kroijer. (2009).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LSE 'Europe in Question' Discussion Paper, 2009-12*.
- Rondinelli, D. A. (1981). Government Decentraliz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Theory and Practice in Developing Countries.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 47(2): 133-145.
- Solow, R. A (1956).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70(1): 65-94.
- Tanzi, V. (1996). Fiscal Federalism and Decentralization: A Review of Some Efficiency and Macroeconomic Aspects. In M. Bruno and B. Pleskovic(eds.), *Annual World Bank Conference on Development Economics*: 295-316. Washington D.C.: World Bank.
- Thießén, U. (2003).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in High Income Oecd Countries. *Fiscal Studies*, 24: 237-274.
- Thomson, J. (2006). *Special Districts: An Institutional Tool for Improved Common Pool Resource Management*. Mimeo.

- Thornton, J. (2007).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Reconsidered. *Journal of Urban Economics*, 61: 64-70.
- Tiebout, C. (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5): 416-424.
- Treisman, D. (2002). *Defining and Measuring Decentralization: A Global Perspective*. unpublished manuscript.
- Vo, D. H. (2008). Fiscal Decentralisation Indices: A Comparison of Two Approaches. *Rivista di diritto finanziario e scienza delle finanze LXVII*, 3(1), 295-323.
- Vo, D. H. (2009). Fiscal Decentralisation in Vietnam: Lessons from Selected Asian Nations. *Journal of the Asia Pacific Economy*, 14(4): 399-419.
- Wasylenko, M. (1987).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Public Budgeting and Finance*, 7: 57-71.
- Weingast, B. (2009). Second Generation Fiscal Federalism: The Implication of Fiscal Incentives. *Journal of Urban Economics*, 65: 279-293.
- Woller, G. and Phillips, K. (1998). Fiscal Decentralization and LDC Economic Growth: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34(4): 139-148.
- Yilmaz, S. (1999). The Impa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Macroeconomic Performance. in Nation Tax Association(ed.), *Proceedings of the 92nd Annual Conference on Taxation 1999*, Washington, D.C.
- Zhang, T. and H. Zou. (1997). Fiscal Decentralization, the Composition of Public Spending, and Regional Growth in India. *Development Research Group Working Paper*.
- Zhang, T. and H. Zou. (1998). Fiscal Decentralization, Public Spending and Economic Growth in Chin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7(2): 221-240.